



韓 · OECD/IEA 공동세미나

—IEA가입과 에너지정책방향—



A(국제에너지기구)가입과 에너지정책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상공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IEA 공동주관으로 지난 10월 6, 7일 양일간 웨라튼워커히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 에너지가격 및 조세제도 ②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 ③ 환경개선 ④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⑤ 비상석유비축문제등이 다루어졌다.

1996년 IEA가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회원국 의무조항과 이 기구가 추구하는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정부는 1992년 IEA측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회원국 가입에 필요한 이행사항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후 금년 3월에는 각도를 달리하여 우리의 핵심 에너지정책과제와 IEA 의무조항 중 우리에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검토를 의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IEA측 인사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관련자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IEA 가입시 의무이행 방법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정하여 이를 최종 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 한·IEA협력 추진경위

1991년 5월 : '90년 2월 관계장관 회의와 대외협력위원회의 한국, OECD협력증진 기본방침에 따라 관계 장관회의에서 IEA 옵서버 참여추진키로 결정

1991년 11월 : IEA 이사회 한·IEA 협력사업 결정

1992년 5월 : IEA 에너지부문 조사단 방한

1993년 1월 : IEA 사무총장 방한

1993년 5월 :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 IEA에 발송

1993년 6월 : IEA 각료회의에서 한·IEA간 지속적인 협력 환영결정

1993년 11월 : 한·IEA DSM 분야 공동컨퍼런스 개최

1993년 12월 : IEA 가입조건 및 한국에너지정책 2차 조사에 관한 협의(아국대표단 IEA 방문)

1994년 5월 : IEA의 한국에너지정책 2차 조사단 방한

2. IEA 가입에 따른 경제적 혜택과 부담요인

우리나라가 IEA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석유위기시 IEA의 비상용통시스템(Emergency

Sharing System)에 의해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그외 IEA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하고 신속한 에너지시장 정보와 선진 에너지이용기술 및 정책기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또 IEA를 통해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IEA에 가입하게 되면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중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은 90일분의 석유 비축 의무임. 현재 우리나라는 비축분은 약 65일분(정유회사 再庫分 30일, 정부 비축 35일)인데 이를 90일분으로 늘리려면 비축설비까지 합하여 약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

3.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IEA측의 주요 평가요약(초안)

●에너지가격관리 정책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에너지가격관리는 에너지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低價政策은 에너지설비투자 재원의 조달을 어렵게 하여 미래의 에너지공급 불안 요인이 되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과 환경문제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정책

한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 프로그램들은 정확한 사후 평가가 없어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한전이 추진하는 需要管理(Demand Side Management)프로그램의 경우 전기요금의 개선없이는 그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임.

●에너지환경 정책

한국은 그 동안의 환경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간의 에너지소비급증으로 환경오염도는 더 심각

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또 한국에서도 인접국으로부터 파급되는 환경문제(transboundary pollution)가 보다 심각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인접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조체제도 갖추어야 할 것임.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규제완화

한국의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은 민영화와 경쟁 강화 추세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한국은 에너지부문에서의 민영화와 경쟁촉진, 그리고 민영화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IEA 회원국들의 경험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전력산업이나 가스산업 등의 민영화와 경쟁체제가 최종소비자 측면에서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한국가스공사가 수직통합된 독점기업의 형태로 민영화될 경우 필요한 투자보수율은 허용하되 비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규제가 필요함.
- 도시가스회사의 면허에는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며 면허의 재발급은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비상 석유비축 문제

한국은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중 하나임에도 고도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급증으로 전략석유 비축량을 그만큼 더 증대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더구나 1996년 IEA가입을 공식 천명한 한국로서는 IEA회원국 의무사항인 90일분 비축조항을 이행하려면 지금보다 대폭 석유비축량을 늘려야 할 것임. 과거 한국 정부는 석유수입량의 90일분 비축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IEA에 가입하려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